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조선 시대의 기록인 ‘국조보감’은 역대 임금들의 선정(善政)을 기록한 책이다. ‘선묘보감’은 그 가운데 선조 때의 내용을 담았다. ‘임진왜란 때 나라의 뜻에 따라 의병들이 일어났으니, 의병의 소리가 나라를 들고 감동받아 밀고 가가는 곳에서 모여들었다. 비록 큰 전공을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백성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라의 운명 또한 그들에 대한 믿음으로 유지되었으니,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호남의 김천일·고경명(高敬命), 영남의 박재우(郭再祐), 호서의 조현(趙顯)이었다’라고 기록하여 임진 의병장으로 대표적인 4인을 들고 있다. 바로 학자 의병장이었다.

그 당시 참모로 많은 의병장들이 활동하였고 수많은 백성들이 의병에 가담하여 나라를 지키느라 자신을 희생하며 의병장들을 따라 애격과 싸우는 전쟁을 치렀다. 6·25 이전의 가장 큰 전쟁은 바로 임진왜란이었으니, 그런 큰 전쟁에서의

학자 의병장 김천일 장군

병장으로 네 분의 공적이 가장 컸다고 칭찬한다면, 역시 그분들 모두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임에 분명하다. 그 네 분들이야 모두 전쟁터에서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친 분들이어서 전쟁이 끝난 뒤에 국가에서는 후한 포상을 내리고 큰 공로에 상응하는 은전을 베풀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에 국가에 공이 큰 학자나 정치가·애국자들의 업적을 현양하는 일로는 사후에 나라에서 시호(諡號)를 주증하는 것이 있었다. 다행스럽게 위의 네 분 의병장들은 업적이 합당한 시호를 하사받았으니, 건재 김천일은 문열(文烈)공, 중봉 조현 또한 문열공이며 제봉 고경명은 충렬(忠烈)공, 망우당 박재우는 충의(忠義)공으로 혁혁한 의병장의 공적을 나름대로 포상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살펴볼 일의 하나는 문(文)과 충(忠)은 시호로는 최고의 수준이지만, 문자(文字)의 시호는 반드시 대학자가 아니고는 거의 내릴 수 없는 시호였다.

조선의 대표적 학자인 퇴계는 문순(文純), 율곡은 문성(文成)이었다. 그런 정도의 큰 학자가 아니면 ‘문’의 시호는 내리지 못하였다. 그런데 율곡의 수제자인 조현은 문묘에 배향되어 조선 18현의 한 분으로 추대되었는데, 왜 김천일은 특

같은 문열공이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있던 말인가.

호남의 학자로서 문경(文敬)공 이항(李恒), 문정(文正)공 김인후, 문절(文節)공 유희춘, 문헌(文獻)공 기대승, 문효(文孝)공 노진, 문열공 김천일이 대표적인 학자로서 만인의 숭앙을 받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유독 이 중에서 김천일의 명성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은 어떤 이유일까. 건재 선생은 진주성 싸움에서 아들 김상건(金象健)과 함께 남강에 투신하여 순국하였고, 둘째 상곤(象坤)은 명이 짧아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인지 선생의 유문이 거의 보존되지 못해, 학문적 업적을 세상에 전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로 인해 그분에 대한 연구와 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할 것이다.

조선 말기인 고종(高宗) 때에야 호남의 대학자 노사 기정진(奇正鎭)과 그의 손자이자 학자·의병장인 송사 기우만(奇宇萬)이 힘을 합하여 ‘간재선생문집’(健齋先生文集)이라는 책을 아주 빈약하게 간행하기에 이른다. 노사는 서문을 짓고, 송사는 발문을 지었는데 이들 조손(祖孫)의 노력으로도 그나마 문집이 전해지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애초에 김천일은 일재 이항이라는 대학자의 문인이었다. 뒤에 김인후·기대승·박순·유희춘 등에게도 학문을 물었으며 중앙의 율곡 이이와 유계 성혼 등과도 친구로 사귀면서 큰 학자의 지위에 올랐다. 그래서 호남의 학통을 말하면서 큰 학자로 대체학에 올랐던 탕당 이식(李植)은 “호남의 상도에는 일재 이항, 하도에는 고봉 기대승의 학자가 있는데 유독 김천일만이 일재 이항의 학통을 이었다”라고 말하여 김천일을 대학자의 한 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렇게 많은 임진 의병장에서 오직 조현과 동격인 문열의 시호를 받은 김천일을 한것 의병을 일으킨 장군으로만 기억하다가 이제는 후손마저 번성하지 못해 의병장으로서의 큰 추앙도 받지 못하고 학자로서의 대접은 강그리 사라져 버렸으니, 이런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행히 근래에 언양 김씨 대종회에서 ‘간재선생문집’이 번역되었다니, 지금이라도 고향인 나주시에서 그분의 현양 사업에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조칼럼



이대규
법률사무소 소름 변호사

‘메이드 인 차이나’가 조악한 모조품의 대명사인 때가 있었다. 간혹 중국 업체가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면 ‘대륙의 실수’라고 오히려 조롱(?)을 받았다. 얼마 전까지의 이야기다.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 된다.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 따지면 우선 떠오르는 중국 제품이 적지 않다. 현재의 이야기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분야는 비단 제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IT산업에서도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인공 지능 연구와 빅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IT기술에 힘입어 중국 최고 인민 법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계 최대의 재판 문서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중국에서 재판 문서를 공개하는 플랫폼인 중국 재판 문서 사이트는 우리 대

인공 지능 시대와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법원의 판례 검색 사이트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 기준 현재 재판 총 문서수가 4862만 9765건이고, 총 방문수가 173억 4848만 6989회인 바, 세계 최대의 재판 문서 사이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재판 문서 사이트는 그 운영이,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나 고도화된 IT기술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하급심 판결문을 포함한 모든 판결문의 공개를 통해 사법 공정(司法公正)을 촉진시키고 사법 공신력(司法公信力)을 제고하고자 하는 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위 중국 재판 문서 사이트에는 2014년 이후부터 등재된 문서수가 갑자기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이 같은 해 1월 1일 시행한 ‘인터넷상에 인민 법원 재판 문서의 공포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때문이다. 위 규정은 중국이 ‘심판 공개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인민 법원이 인터넷으로 재판 문서를 공포하는 것’을 규범화해 사법 공정을 촉진시키고, 사법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자국의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행정 소

송법 등 관련 규정과 인민 법원의 실무를 결합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현재 혼인사건의 당사자, 형사사건의 피해자, 미성년자 등을 제외하고는 실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중국이 사법 정보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판결문 공개에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자국의 사법 제도의 혁신에 기여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에서 사법 정의가 제고된다면 판결문 공개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가 하급심 판결문의 인터넷 일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전히 논쟁만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이 때 하급심 판결문을 인터넷상에 공개하기로 한다면 사법부의 신뢰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의 또 다른 효과는 ‘인공 지능 법률가’, 이른바 알파로(AlphaLaw)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다. 이것은 미래의 기술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의 신뢰 제고 못지 않은 효과라 하겠다. 빅데이터를 학습하여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인공 지능 법률가’는 법률 소비자에게는 나홀로 소송 수행을, 변호사에게는 효율적인 판례·법령 검색을, 법관에게는 업무 경감을 통한 재판 시간 확보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인공 지능 법률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 인력과 법률가가 협업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 시장에 적합한 ‘인공 지능 법률가’부터 시작하여 다른 나라 법률 시장에 맞는 ‘인공 지능 법률가’를 개발하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인공 지능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의 발 빠른 대처를 타산지적으로 삼아 장애가 되는 재판 법제를 정비하고 법관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사례 깊은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하루빨리 하급심의 판결문을 포함한 모든 판결문을 인터넷상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기고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으면서 가상 화폐의 요소 기술 정도로 생각되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의 성장 가능성을 기술의 측면이 아닌 혁신의 관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2008년 금융 위기로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에서 출발한 한 익명 프로그래머의 가상 화폐 아이디어가 이제 금융을 넘어 제조, 유통, 물류, 농수산, 공공서비스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고, 가트너(Gartner)는 블록체인의 연간 성장률을 2020년 기준 128%로 예상했으며 사업적 측면의 부가가치는 2030년 3조 달러 이상으로 전망했다.

블록체인은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관리 기관 없이 네트워크를 통

블록체인이 지역 산업에 가져올 변화

해 분산하여 블록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종의 정보 저장 기술로, 하나의 중앙 집중형이 아닌 흩어진 분산형으로 저장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분산하여 공동으로 정보를 검증·기록·보관함으로써 보안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모든 디지털 거래 내역이 기록된 정보는 암호화되어 블록체인을 통하여 전송되고 변경이 불가능하다. 거래 기록이 분산되어 보관되므로 권한 있는 중앙 중개 기관이 필요가 없고, 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계약 및 다른 종류의 데이터 기록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 위한 위험 없이 다수에게 공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7년 4개, 2018년 6개의 블록체인 관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투명한 전자 투표 시스템, 전자 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스마트 계약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스마트 개인 통관 서비스, 청년 활동 지원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심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고, 서울시 노원구는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 화폐인 노원 NOWON)을 도입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거래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매칭하고, 전기안전공사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기 화재 발화 지점 분석 지원 서비스를 구축했다. 해외에서도 미국은 의료 정보 기록 및 보안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고, 스웨덴은 블록체인 기반 국가토지 등기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다. 싱가포르는 무역 금융사기 대비책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중복 자금 청구알람 시스템을 개발하고, 네덜란드의 와게닝헨 대학은 농식품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 디지털 전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블록체인 기반의 농수산물 생산·유통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농수산물 관련 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축, 블록체인 적용이 가능한 시범 사업 발굴, 스마트시티 연계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토지, 선거, 의료, 문화, 예나

지 등 다양한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연동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역에서도 공공 혁신과 산업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유 경제 활성화, 데이터 유통 체계 구축, 기부금 관리, 작가들의 문화 예술 저작권 등에 적용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투명성을 높여갈 수 있다. 공공 서비스 인증과 공공 데이터 거래 등 행정 정보 이용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산업 관점에서도 전력 분야에서 예나 지 거래, 전기가 충전 및 전력 판매 요금 결제, 전력 빅데이터 보안과 같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컨테이너 화물 추적, 글로벌 공급 사슬상의 계약 디지털화 등 해운 항만과 물류 분야에 활용하면 투명하고 안전한 공급 사슬 구축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블록체인 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역내 관련 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성, 블록체인 적용이 가능한 시범 사업 발굴, 스마트시티 연계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社說

시도 혁신도시 갈등...공동 유치 정신 잇었나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인 빛가람의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할 제단 설립과 복합 혁신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광주주시와 전남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센터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시도가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나주시 빛가람동 5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복합 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유치 과정에서 상생의 표본으로 꼽힌 빛가람을 성공 모델로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서다. 2021년 완공될 이 센터에는 창업 인큐베이터와 기업 전시실, 산학연 발전 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 기관, 대학을 아우르는 ‘혁신도시 시즌 2’의 컨트를 타워 역할을 할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설립해 이곳에 입주 시킬 예정이다.

문제는 센터 건립에 드는 지방비 조성이다. 정부는 전체 예산 282억 원 중 13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나머지 152억

원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련해야 할 사항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이전 기관들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 등 537억 원으로 건립하자는 입장이다. 공동 혁신도시 유치 당시 약속한 ‘공동 발전 기금’ 조성을 통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반면 전남도는 정주 여건 개선에 1576억 원이 투입된 만큼 당장은 기금 출연이 어렵다고 있다. 혁신도시 유치 과정에서 상생의 표본으로 꼽힌 빛가람을 성공 모델로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서다. 2021년 완공될 이 센터에는 창업 인큐베이터와 기업 전시실, 산학연 발전 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 기관, 대학을 아우르는 ‘혁신도시 시즌 2’의 컨트를 타워 역할을 할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설립해 이곳에 입주 시킬 예정이다.

문제는 센터 건립에 드는 지방비 조성이다. 정부는 전체 예산 282억 원 중 13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나머지 152억 원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련해야 할 사항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이전 기관들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 등 537억 원으로 건립하자는 입장이다. 공동 혁신도시 유치 당시 약속한 ‘공동 발전 기금’ 조성을 통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반면 전남도는 정주 여건 개선에 1576억 원이 투입된 만큼 당장은 기금 출연이 어렵다고 있다. 혁신도시 유치 과정에서 상생의 표본으로 꼽힌 빛가람을 성공 모델로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서다. 2021년 완공될 이 센터에는 창업 인큐베이터와 기업 전시실, 산학연 발전 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 기관, 대학을 아우르는 ‘혁신도시 시즌 2’의 컨트를 타워 역할을 할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설립해 이곳에 입주 시킬 예정이다.

고교 교육과정 개정안 5·18 비중 확대해야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예고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의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고교 한국사에서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미흡하고 비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사를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으로만 나눴다. 5·18은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단원에 포함돼 다뤄진다. 또한 이 단원에서도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7·4남북 공동성명, 유신독재와 반대 운동, 5·18민주화운동 순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해 5·18을 유신독재 몰락의 말미에 있었던 많은 사건 중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6월 항쟁은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 발전’ 단원에서 별도로 다룬다. 그러

나 5월 단체는 교육부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6월 항쟁을 정점으로 한 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1980년 5·18을 이야기해야 5·18과 6월 항쟁 및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과 평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개정안은 한국 현대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5·18을 내용 체계에서조차 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5·18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종합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 내용이 확정되면 학생들은 2020년부터 새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때문에 미래 세대의 우리 청소년들이 5·18을 제대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5·18에 대한 교과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5·18 폄해 시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도 교육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논어(論語) 위정(爲政) 편에 보면 은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온다. 과거의 학문과 역사 등이 바탕이 되어야 새로운 지식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대를 이어 가는 지식의 축적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인데,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지식은 계속, 새를 게 업데이트 된다’는 정도가 될 것 같다.

공자와 함께 중국의 성인으로 불리는 노자가 쓴 도덕경(道德經) 8장에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사자성어가 등장한다. ‘최고의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

상선약수

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道)에 가깝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다. ‘굽이 휘어 가며,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외형적 특징을 감안한 것인데, 과학이 발달한 요즘 시각으로 해석하면 조금은 달라질 것 같기도 하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물(water)은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녹여 내는 만능 용제(Universal Solvent)다. 무색무취의 투명한 화학물질인 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용제(溶劑)보다도 더 많은 물질을 습사리 녹여 낸다. 물이 ‘생명의 기원’이 되는 것도, 태초의 지구에 존재했던 수많은 물질이 물에 녹아들어 ‘원시 수프’(primeval soup)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리처드 도킨스는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40~50억 년 전 생명원 유기물들은 해안 부근의 말라붙은 물거품이나 떠 있는 작은 물방울 속에 국지적으로 농축되었을 것”이라며 생명의 기원이자 만능 용제로서 물의 효용을 적시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해석을 요즘 말로 업데이트 하자면, ‘물은 모든 것을 녹여 내 융합시킴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듯하다.

촛불 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선 그동안 감춰지고 억눌려 온 온갖 갈등이 폭죽처럼 외부로 터져 나오고 있다. 물 흐르듯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만 기다리는 노자의 ‘도’는 지금과 같은 ‘충돌의 시대, 맞쟁의 시대’에는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그보다는 사회의 모든 갈등을 한데 녹이고 융합시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차기용 용광로’와 같은 물의 ‘도’가 필요하

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예행부	220-0551
220-0664	220-0693	사진부	220-0693
220-0642	220-0697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